

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353
----------	------

2007. 8. 9
조직개편안심사특별위원회

I. 심사 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7. 7. 18 (의안번호 제1354호)

나. 제 안 자 : 광양시장 이성웅

다. 조직개편안 회부

○ 회부일자 : 2007. 8. 3

○ 위원회명 :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조직개편안 심사특별위원회(6인)

- 위 원 장 : 정현완의원, - 간 사 : 강정일의원

- 위 원 : 장석영 의원, 박노신 의원, 서경식 의원, 배학순 의원

II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총액인건비제 시행('07.1.1)으로 자치단체 정원운영이 총액인건비제 범위내에서 자율 책정이 가능하게 되어,

○ 철강·항만을 위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흥 산업 항만도시 건설과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적정인력을 그동안 추진한 경영진단 결과와 직무분석 및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증원 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총괄

현정원 (A)	증 감			변경정원(A+B)	비고
	계(B)	증	감		
864	41	41	-	905	

○ 정원관리 기관별

구분	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출장소	읍면동
현행	864	395	19	163	95	11	181
조정	905	412	20	160	120	10	183
증감	+41	+17	+1	△3	+25	△1	+2

○ 직종별 정원

구분	계	일반·연구·지도(78%이상)	기능·고용(20%이내)	별정·정무(2%이내)
현행	864	720	126	18
조정(기준)	905(905)	756 (706)	131 (181)	18 (18)
증감	+41	+36	+5	-

○ 직급별 정원

【 일반직 】

구분	계	4급이상 (1%이내)	5급 (7%이내)	6급 (26%이내)	7급 (30%이내)	8급 (24%이내)	9급 (12%이상)
현행	695	5	41	177	206	175	91
조정(기준)	729 (729)	5 (7)	48 (51)	189 (190)	213 (219)	184 (175)	90 (87)
증감	+34		+7	+12	+7	+9	△1

【 기능·고용직 】

구 분	계	6 급 (3%이내)	7 급 (9%이내)	8 급 (15%이내)	9 급 (33%이내)	10 급 (40%이내)	고용직
현 행	126	0	15	19	37	55	-
조정(기준)	131 (131)	3 (4)	13 (12)	20 (20)	40 (43)	55 (52)	-
증 감	+5	+3	△2	+1	+3	-	-

【 연구·지도직 】

구 분	계	연 구 직			지 도 직		
		소계	연구관 (3%이내)	연구사 (97%이내)	소계	지도관 (6%이내)	지도사 (94%이내)
현 행	25	0	0	0	25	2	23
조 정	27	2	-	2	25	2	23
증 감	+2	+2		+2	-	-	-

【 별정직·정무직 】

구 분	계	정무직	5급상당 (7%이내)	6급상당 (34%이내)	7급상당 (39%이내)	8급상당 (18%이내)	9급상당 (2%이내)	비고
현 행	18	1	-	17	-	-	-	보건진료원 6~7급 상당으로 비율초과
조 정	18	1	-	17	-	-	-	-
증 감								-

III. 심사결과

가. 의결일자 : 2007. 8. 9(조직개편안 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)

나. 심사결과 : 원안의결(표결 - 거수)

- 재적위원 6명 : 찬성 4 명, 반대 - 명, 기권 2 명

IV. 심사의견

가. 심사총괄

- 본 위원회에서는 **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안**에 대해 양 상임위원회(총무, 산전)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8. 6부터 8. 7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음
- 심사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시다만, 본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
 - 집행부에서 금번 조직개편시 우리시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경영진단도 실시하고 **개인별 직무분석과 면담조사**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고
 - 인사적체 해소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
-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용 원안대로 의결하고 사후 감시·감독활동을 강화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다음 조직개편시 개선하기로 하였음

나. 소수의견

-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
 - 새로 신설되는과 중 감사평가담당관, U-City정책과, 환경보전과, 하수과 중에서 1~2개과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과, 1개과를 폐지하고 서울사무소를 신설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음

- 또한, 기존에 설치된 기구 중 업무가 중복되거나 업무량이 줄어든 민원출장소와 직소민원실을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된 분야나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투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
-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조직부문은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집행부안대로 의결하여 주고 인력은 현 정원을 유지하거나 10명 이내로 증원해야 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

다. 기타사항

- 담당조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한 기구가 아니므로 담당의 소속 실과가 잘못되었거나 다른 부서와 통합 또는 폐지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절히 조정토록 의견을 정리하여 통보키로 하였으며
- 이와 더불어 양 상임위원회(총무, 산건)에서 제시한 의견도 추후 조직개편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통보하기로 하였음

조직개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견

① 기구폐지 및 통폐합

- 민원 온라인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줄고 민원봉사과와 업무가 중복됨으로 민원출장소와 직소민원실 폐지
- 생산복지과 보육청소년담당을 보육분야와 청소년분야로 분리 하고, 기술보급과 생활지원담당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조직 이므로 통폐합
- 문화홍보담당관실 문화담당과 관광진흥담당은 업무가 중복됨 으로 1개담당으로 통폐합, 홍보기획·홍보지원 분리운영 검토
- 자치지원과 시정담당과 주민자치담당, 교육지원담당은 유사한 업무가 많고 업무량이 적으므로 2개담당으로 통폐합
- 설계심사담당과 건설시공담당은 기술업무로써 도시과나 건설과로 두는 것이 타당하며, 감사담당과 평가분석담당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복귀하고 감사평가담당관실은 폐지

② 기구대체 · 신설 및 업무이관

- 국고확보, 중앙부처 유대강화 등 업무추진을 위한 광양시 서울사무소 신설(5급)
- 철강항만도시,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시 슬로건에 걸 맞는 조직으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또는 기업지원 전담부서 신설
-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기획단 신설
- 자치지원과 3개담당을 2개담당으로 통폐합 하는 대신 인구 늘리기 및 행복마을 조성 업무담당 신설

- 잦은 명칭변경으로 인해 시민들의 혼선이 초래됨으로 자치혁신과의 명칭을 당초 명칭인 자치지원과로 유지
-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연계강화를 위해 매실특작과의 원예 특작담당은 농업지원과로 이관하고 농업지원과의 수출유통담당과 친환경농업담당은 매실특작과로 이관
- 교통행정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인력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내에 과태료 징수담당 신설
- 환경보전과 대기보전담당을 대기정책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환경관리과로 이관하고 환경관리과 환경지도담당을 환경보전과로 이관
- 세정과는 담당수가 너무 많아 통제가 곤란함으로 2개과로 분과
- 재래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 전담 부서 신설

③ 기구명칭 변경

- U-City정책과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로 명칭 변경
- 환경관리과를 친환경정책과로 명칭 변경

④ 인력조정

- 유사중복 조직정리, 사무자동화에 따른 성과 및 과소 읍면동 통폐합 관련 정부방침을 적용하여 인력 재조정 필요
- 경영진단시 광양시 공무원 1일당 근무시간 9.93시간으로 조사되었는데 기본데이터가 잘못 산정된 결과를 가지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잘못 되었음. 읍면동 총무담당 존립성도 문제
- 하수과장, 도시개발사업소장 등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반드시 정원을 기술직으로 조정 필요
- 의회 전문위원실 운영, 총무, 산전위에 행정7, 환경7, 농업 7급 등 3명 인원보강 필요

⑤ 기타의견

- U-City정책과의 기대효과 미흡, 따라서 과직제를 폐지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 U-City담당급으로 조정
- 항만통상과의 해양수산담당은 농업지원과로 이관
- 행정혁신국장 보다는 총무국장의 종전명칭이 더 친근감이 있고 익숙한 명칭임, 따라서 기구명칭이 공무원 위주로 자주바뀌어 시민들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의견임
- 정원 41명 증원은 과다 증원으로 판단되며, 정원 증원시 기술직 위주의 증원이 필요함